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형성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면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어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월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해서 사과나 반성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는 등 ‘실용외교’ 원칙 아래 일본과의 관계를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나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

이날 발언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일본에 더욱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외교계의 평가다.

과거에도 3·1절은 한일관계의 지향점이 천명되거나 당시의 한일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는 “발목이 잡혀선 안 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2003년 2월25일 한일정상회담)고 밝히는 등 한일관계에 있어 이 대통령과 비슷한 기조였고 취임 첫 3·1절(2003년) 기념사에서도 ‘과거’를 끄집어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 등으로 한일관계에 먹구름이 몰려오던 2005년 3·1절 기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면서 배상 문제를 정면으로 끄집어내 파장을 일으켰다.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와 교과서 왜곡문제까지 겹쳐 한일관계가 악화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실용외교’ 재천명 “진실 외면도 안되지만 과거에 얽매어선 안 돼”

일로로 치닫던 2006년에는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 대해 “인류의 양심과 도리에 맞게 행동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

제가 불거졌던 2001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인근 나라들과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쓴소리를 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보복·야당 탄압 망령 사라져야”

정동영, 한나라당에 고소·고발 취하 촉구

17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일 “최근 후진정치의 상징인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대국민 성명을 내고 “제 선거운동에 참여해 헌신적으로 애쓴 많은 분들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며 “87년 이후 국가권력이 전면에 나서 정적을 숙청하는 관행은 사라졌으며 5년전, 10년전에도 대선 때의 고소·고발 사건을 서로 취하하고 새롭게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의 이 같은 태도는 4·9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사실이라면 나라 장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전적으로 제 책임으로, 당과



후보를 위해 애쓴 분들의 양식과 인격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끝끝내 문제를 삼켰다면 후보였던 저 한 사람만 겨냥해달라. 모든 책임을 제가 다 감당하겠다”면서 “선거에 진 뒤 승자에게 비통한 호소를 해야 하는 불행한 후보는 제가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의원과 당직자를 포함해 20명 가량이 한나라당에 의해 고소고발됐으며 박영선 김현미 의원이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소환통보를 받았고 서혜석 김종률 의원 등도 3일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봉주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강금실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보복 대책위를 구성한 상태로, 당 지도부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응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서울 은평을 출마...대운하 저지에 총력”

문국현, MB 최측근 이재오에 도전장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4·9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4선 고지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도전장을 던졌다.

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유불리를 떠나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2인자이자 대리인격인 이재오 의원을 상대로 싸워 승리하는 것이 사람과 환경을 살려줄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은평을 출마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그동안 종로와 은평을 등 몇 군데를 후보지로 놓고 고심해 왔다.

그는 “이제 일자리 창출 국회를 만들고 한반도에 대재앙을 가져올 대운하를 저지하기 위한 대장정에 오르고



자 한다”며 “은평을이야말로 민의를 무시한 채 경부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토공 기반의 가치와 환경과 사람 중심의 창조적 자본주의 가치를 대비시킬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는 일부 소수 계층과 일부 지역만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기존 야당을 또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창조한국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고베풀린 정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낡고 병든 세력을 교체, 대한민국을 재창조하는 미래세력을 중심에 세우는 일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용 탁자 없애고 훈·포장 수여식 위치도 변경

추대통령 3·1절 기념식 ‘파격 행보’ “대통령께서 입장...” 멘트도 생략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9주년 3·1절 기념식에서도 취임이후 보여준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과거 대통령이 참석한 국경일 기념식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삼기는 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이 직접 ‘권위적인 걸치레는 최대한 줄이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우선 통상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이 등장할 때 나오는 “대통령님께서 입장하십니다”라는 진행자의 안내멘트는 이날 생략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김국주 광복회장을 위시한 독립유공자들과 나란히 단상에 입장했고, 참석자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박수로 환영했다. 행사 후에는 단상 아래까지 내려와 참석자들과 악수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단상의 모습도 달라졌다. 과거 대통령 부부 앞에 놓였던 꽃장식이 울려진 전용 탁자가 사라졌고, 맨 앞자리에 따로 앉던 관행을 없애고 다른 참석자들과 같은 선상에 의자가 배치됐다. 대통령 기념사를 하기 위해 준비된 연설대에는 봉황이 그려진 표장도 없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훈·포장을 수여하면서 수상자가 관객석을 바라보도록 서게 하고 자신은 관객들에게 뒤통수를 보이는 방향으로 섰다.

또 단상위에 독립운동 단체 및 유가족의 자리를 예년보다 많이 배치하고, 이들을 위해 행사가 끝난 뒤에는 별도로 티타임을 갖기도 했다.

티타임에서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김국주

광복회장이 낭독한 독립선언서에 언급, “지금 봐도 명문장이다. 당대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모르겠다”면서 “한 글자도 버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참석자가 광복회원 유족 장학금 확대를 건의하자 “챙겨보겠다. 실천하는 정부이니 실천하겠다”면서 “옛날 광복하시던 분들은 고생하느라 자식을 교육을 제대로 못시켰는데 같은 조건이면 선열들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기념식에는 임재철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도 참석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앞서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선거 ‘매니페스토’ 대폭 강화된다

선거법 개정 따라 ‘정책 선거’ 기반 구축돼

오는 4·9 총선부터 정책선거의 기치를 내건 매니페스토 운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대폭 추가돼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것.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최대한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우선 언론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적용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개정 선거법은 언론기관이나 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를 한 뒤 이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그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해 비교평가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았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해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언론기관이 아닌 각종 단체중에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방한 단체는 비교평가 결과 공표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도 함께 밝히야 한다.

향후 실시될 대선 및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책선거 관련조항도 마련됐다. 대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올 예비후보자는 홍보물을 만들 때 전체 면수의 50% 이상을 선거공약 및 이질절차, 재원조달 방안 등 공약을 설명하는데 할애해야 하고, 사진·성명·학력 등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전체 면수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2-722-0100

10215300-90000